

2026.1.23.(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차도순 국장(을지원국) /이현정 비서관(박홍배 의원실) 02-784-1460

명절 · 선거 당일에는 택배도 쉬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쿠팡 명절 휴업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설·추석 명절, 공직선거일 택배 산업 의무휴업 지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박 의원 “빠른 배송이 인간다운 노동 조건에 우선할 수 없어...노동자 착취하는 후진적 산업 구조, 국가가 바로 잡을 것”

2026년 1월 23일 (금)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설 · 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문수 · 김윤 · 민병덕 · 박홍배 · 정진욱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했다.

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절과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 휴식권 · 참정권 침해 우려와 산업 전반의 ‘나쁜 경쟁’ 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쿠팡의 ‘멈추지 않는 배송’의 구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온 타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나쁜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의 ‘365일 배송’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온 업체들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나쁜 경쟁’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빠른 배송’이 아니라 노동자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배송”이라며, 쿠팡이 다가오는 설 연휴부터 명절 휴업을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명절과 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쉬는 날조차 불안한 현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의무휴업일 위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주 7일 배송과 심야·새벽 배송을 고수하며 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빠른 배송이 인간다운 노동조건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식권과 참정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쉬면 불이익을 받는 현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며 “명절만큼은 택배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말하는 휴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심각한 휴식의 유료화”라며 “휴무를 이유로 밥줄이 끊기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쿠팡의 영업 방식은 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를 말살하는 ‘나쁜 경쟁’을 낳고 있다”며 “노동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나쁜 경쟁 부추기는 쿠팡의 ‘365일 배송’ ,
쿠팡은 과로노동을 멈추고 노동자에게 명절을 돌려달라!”**
-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및 쿠팡 명절 휴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쿠팡 노동자들은 이번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쿠팡은 스스로를 ‘혁신의 선두주자’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극한의 과로 노동으로 내몰아 성장을 일궈왔다. 쿠팡에게 묻는다. 쿠팡이 말하는 ‘로켓’은 누구의 희생으로 발사하는가.

2020년부터 주요 택배 사업자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휴무에 참여하고 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휴무를 보장해왔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자 신뢰의 산물이다.

하지만 쿠팡은 공동체의 약속을 비웃으며 연중무휴 배송체제, ‘365일 배송’을 고수했고,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강요하며 자사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해왔다.

특히 쿠팡은 명절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일에도 ‘멈추지 않는 배송’을 강행했다.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쿠팡은 노동자들을 투표소가 아닌 배송 현장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역시 휴무 불참을 선언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서야 뒤늦게 말을 바꾸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쿠팡. 그 무엇도 법과 노동자의 생명 위에 군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탈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택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쿠팡이 멈추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준수해 온 타 택배사들까지 물량 이탈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나쁜 경쟁’의 독을 퍼뜨리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3차 사회적대화 역시 쿠팡의 비협조로 공전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택배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단 하루뿐이다. 이조차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대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의에만 의존한 제도는 쿠팡과 같은 ‘법꾸라지’ 앞에서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제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국가 제도 차원의 강력한 보호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휴업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빠른 배송’이 아닌, 노동자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배송이다. 쿠팡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의 틀로 복귀하여 명절 연휴 배송을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존중하라. 무엇보다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에 타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을 선언하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명절에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회,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가 로켓의 속도에 짓밟히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23일(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